

5·18 때 헬기 조종사들 '진실의 입' 열까

11일 재판 앞두고 전두환측 첫 증인으로 5명 신청 관심 집중 1995년 검찰조사선 "사격명령 받았지만 발표사실 몰라" 진술 헬기사격 진술 가능성 낮고 추가증인 요청 등 재판 지연 의도도

1980년 5월 광주 하늘에서 헬기를 직접 조종했던 조종사들이 39년간 침묵했던 '진실의 입'을 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전두환(88)씨의 7번째 사자명예훼손 증인신문이 열린다. 이번엔 증인으로 신청된 헬기 조종사들은 전씨측 변호인이 신청한 첫 증인으로, 5·18 당시 광주로 출격할 헬기 조종사 3명과 당시 지휘체계에 있던 군 장교 2명 등 5명이다. 이 중 2명은 지난 10월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전달했으며, 나머지 3명은 현재까지 불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번 재판이 5·18 당시 헬기사격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는 점에서, 당시 헬기조종사들의 증언 여부에 따라 재판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증인은 송모(당시 육군 1항공여단장)씨, 구모(당시 103 항공대 소속 AH-1J 헬기 부조종사)씨, 서모(당시 506항공대 소속 500MD 부조종사)씨, 김모(당시 506항공대장)씨 등 5명이다. 본보가 확보한 1995년 작성된 검찰조사에 나온 송모 여단장과 구모·서모 헬기부조종사 등 3명의 진술을 살펴보면 당시 실탄을 실은 무장헬기가 광주상공에 출동한 사실과 사격 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헬기의 발표사실에 대해선 '모른다', '본적 없다'고 진술했다. 송씨는 당시 검찰조사에서 "1980년 5월 22일 20mm 발칸포탄 500발로 무장한 AH-1J(일명 코브라)헬기 2대와 7.62mm 2000발을 적재한 500MD 헬기 4대를 광주로 보냈다"면서 "5월 24일 폭도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으니 폭도 제압 사격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긴 했지만, 사격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 구씨는 "경기도 광주에 있던 103항공대에서 5월 22일 점심때 무장한 코브라 헬기를 1시간 30분 가량 직접 몰고 광주 송정리 비행장에 도착했는데, 이미 500MD 헬기들이 와 있었다"며 "당시 전교사 전투발전부장인 김순현으로부터 위협 사격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실제 사격을 한 일은 없었다"고 검찰에서 주장했다. 500MD 헬기 부조종사로 5월 21일 전주에서 광주 송정리 비행장으로 왔다는 서씨도 "7.62mm 기관총과 2000발 정도의 실탄을 싣고 광주로 출동 했지만, 실탄 장전 여부는 말하지 못하겠다"면서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광주 시내 공중 정찰을 실시했고, 사격지시를 받은 적이나 사격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시 506항공대장으로 이번엔 증인출석 요구를 받은 김씨도 2017년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에서 "당

시 전교사 전투발전부장인 김순현이 5월 22일에 도청 옥상에 설치된 대공화기진지제압을 명령했지만 민가 피해를 우려해 거부하고 수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씨는 "광주전쪽을 사격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정식 서면명령서를 요청하며 거부했다"면서 "이에 김순현이 자신의 수첩을 한 장 찢어서 '즉각 출격해 사격할 것'이라고 하달했으나 따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군 전문가들은 "당시 계엄상황의 분위기에서 전교사의 명령을 거부하고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며 김씨의 진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여고 교사가 성희롱적 발언"…광주교육청 조사 나서

광주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광주교육청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생들로부터 교사 A씨가 학생의 외모를 평가하는 등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학교에서 해당 학년 학생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교사 4명이 추가 가해자로 지목됐다. 또 1명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교사에게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취준생 보증금으로 호화생활…임대사업자 등 구속 기소

전북에서 임차인들이 낸 수십억 원의 보증금을 호화생활로 탕진한 임대사업자 등이 구속기소됐다. 임대사업자가 관리비를 받고도 공과금 조차 내지 않은 탓에 피해자들은 가스·전기, 수도가 끊긴 열악한 원룸에서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임대사업자 A(46)씨와 B(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을 도운 A씨의 누나를 불구속기소하고 달아난 A씨의 남동생을 지명수배했다. A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전북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교 주변에서 원룸 임대 사업을 하면서 전세 보증금 39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노후 원룸을 값싸게 사들인 뒤, 기존에 있던 월세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

로온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아 다시 부동산을 사는 수법으로 원룸의 수를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원룸의 전세 계약 만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을 낸 이들은 대부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임차인이 낸 보증금으로 제주도엔 펜션 등 부동산을 사고 국내 내 카지노에서 도박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가의 외제 차를 구입하는가 하면 100여 차례의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했다. 이들은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이 임대 광고를 보고 원룸을 찾은 대학생 등에게 임차인 현혹 등을 허위로 고지하고 계약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군산·박기성 기자 nogusu@



태권브이에 불인 아이들의 꿈 7일 광주시 북구 운암도서관 어린이실에서 열린 '로봇 태권브이와 함께 꿈꾸는 세상' 행사에 참석한 서영유치원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적은 스티커를 태권브이에 붙이고 있다. 이날 제작된 모형 태권브이는 도서관 로비에 전시된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전씨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이날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만약 조종사들이 헬기사격을 했거나 사격을 목격한 것을 진술한다면 재판도 마무리 될 것"이라면 서도 "조종사들이 이를 부정하거나 새로운 인물이 거론된다면 추가 증인 요청 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또 "전두환 전 대통령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출석했다"며 "헬기 조종사들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으면 검찰과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해서라도 반드시 출석시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씨측이 이처럼 당시 헬기조종사 등 핵심 군인들의 증인 출석을 강력히 요청하는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이들이 자신 또는 동료의 헬기사격을 진술할 가능성이 낮으냐는 추가증인 요청에 따른 재판지연 효과 등을 염두한 것이라는 분석 등이 나오고 있다. 이는 이들이 그동안 검찰조사 등에서 80년 5월 당시 사격명령을 받긴 했지만, 발표사실은 모른다고 진술해 왔기 때문이다. 전씨측 변호인이 이번 재판에 요청한

'백남기 유족에 5400만원 배상' 화해 권고에 주치의 불복

고(故)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가 백씨 유족들에게 5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불복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백씨의 주치의인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심재남)에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

를 제출했다. 원고와 피고가 모두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이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백 교수가 이의신청서를 냈에 따라 이 사건은 다시 재판에서 다루게 됐다. 다만 또 다른 피고 측인 서울대병원 측은 결정을 받아들인 만큼, 재판부는 백 교수에 대해서만 불리하게 정직 변론을 재개할지 판단하고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백남기씨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손 불태우에 맞고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 서울대병원 측은 백선하 교수의 의결에 따라 백남기씨 사망진단서에 사망 원인을 외부 충격에 따른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논란을 일으켰다.

백씨 유족은 이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달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가 5400만 원을 유족에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냈다. 서울대병원 측은 2017년 백남기씨의 사인을 '외인사'로 공식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백 교수의 당시에도 "(병사로 기재한)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직권 남용·명예훼손 고발 관련 전북교육감 경찰 출석 조사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에서 학부모들로부터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7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한 김 교육감을 상대로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 전반과 관련된 발언의 사실 여부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학부모 고발 건으로 김 교육감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피의사실 공표 등의 문제로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상산고 학부모 3명은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에서 교육감의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행위가 있었다면서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학부모들은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평가 기준점수를 다른 시도 교육청(70점)보다 10점 높게 책정했고, 3% 이내 혹은 자율이었던 사회 통합전형 대상자 평가 점수를 10% 비율로 올리는 등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북·박기성 기자 parkks@

샤넬 직원들 업무 개시 전 몸단장 '꾸밈 노동' 수당 청구 기각

샤넬 직원을 하는 이른바 '꾸밈 노동' (그루밍)에 드는 시간(그루밍)에 드는 시간에 대해 초과근무 수당을 달라는 샤넬코리아 직원들의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최형표)에 따르면 샤넬코리아 백화점 매장 직원 335명은 규정된 근무시간보다 실제로는 30분 일찍 출근해 몸을 단장해야 한다며 사측을 상대로 추가 수당(직원당 3년치 500만원씩) 임금청구 소

송에 나섰다 결국 패소했다는 것. 샤넬코리아 측은 "공식적 근무 시작 시간은 오전 9시 30분이지만, 샤넬코리아 측이 자체 꾸밈 규칙인 '그루밍 가이드'를 엄격하게 적용한 메이크업-헤어-복장을 그때까지 갖추도록 하므로 실제로는 오전 9시 출근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한 반면, 샤넬코리아 측은 "오전 9시 30분까지 '그루밍'을 마치고 지시한 바 없다.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메이크업과 개성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반박. /연합뉴스